

NEWS

2025년 4월 11일 금요일

한방병원 신설 막는다...광주시, 과잉공급 병상관리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등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재직 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 휴가'를 최대 7일까지 쓸 수 있게 된다.

또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가 신설되고, 임신기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모성 보호 시간' 사용 신청도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직 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인 공무원이 해당 재직 기간 동안 5일을,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10일 내의 임신검진휴가를 배우자 공무원도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보장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임신 12주 이내나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이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안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휴가 승인 여부를 복무권자가 판단해 자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1면 '인공지능'서 계속

현재 광주는 국내 유일 국가AI데이터센터 운영, 실증장비 구축, AI사관학교 운영, 퓨리오사 등 276개 인공지능기업 집적, 1만1000여 명의 인재 배출, 전국 900여개 기업에 AI 연구개발(R&D) 2000여건 지원 등 성과를 창출, '인프라·기업·인재'로 이어지는 자생적 AI 생태계를 완성한 상태다.

강 시장은 "AI는 광주만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여는 프로젝트이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만이 대한민국 AI가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3기 병상수급·관리계획 수립...내달부터 맞춤형 시행 필수 의료 외 신·증설 제한...29일까지 행정 예고 등

광주시가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국민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는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병상 수급관리에 나선다.

광주시는 '제3기(2023년~2027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제3기 병상 수급·관리 계획은 지역 맞춤형 병상 신설과 증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3년 8월 발표한 '병상 수급 기

본시책'에 근거해 수립했다.

광주시는 이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병상 수를 지역 수요에 맞게 관리하고, 합리적인 병상 운영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광주지역은 인구 대비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의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반면 병상 대비 의료인력(의사·간호사·한의사)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병상이 과다한 실정이다.

광주시가 오는 2027년 기준으로 진료 권별 병상 공급 및 수요량과 수급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병원은 약 8200~9800 병상, 요양병원은 약 6200~7400 병상, 한방병원은 약 1700~2800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과잉 공급이 예상되는 병상에 대해 관계 법령 및 보건복지부 기본시책에 따라 신규 병상 신설 및 증설을 제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기본시책에 따르면 병상 공급 관리 대상은 일반병상과 요양병상만 해당하지만, 광주시의 경우는 한방병상이 과다해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실제 지난 2023년 기준 광주지역 인구 10만명 당 한방병원 수는 6.1개로, 전국

평균 1.1개보다 무려 5.5배 많다. 특광역시 한방병원 수를 보면 광주가 87개로 서울 85개보다 많다. 이어 인천(45개), 부산(26개), 대구(18개), 대전(17개), 울산(6개), 세종(3개) 순이었다.

또 2023년 6월 기준 광주지역 한방병상 수는 5835병상으로, 전국 한방병상 수(3만4929 병상)의 16.7%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처럼 광주지역 한방병상의 과잉 수준이 타 광역시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확인돼 한방병상의 관리대상 포함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응급·분만·소아·공공분야 등 필수 의료 병상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2023년 9월부터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수립 실무전담팀(TF)'을 구성해 병상수, 의료수요, 병상가동률 등 의료자원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과 보건복지부 심의 등을 거쳐 지난 2월 최종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오는 29일까지 20일 간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정영화 복지건강강국장은 "병상수급 관리계획 시행으로 추가적인 병상 공급을 억제하는 등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공공성과 효율성을 균형있게 고려한 병상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광주여성가족재단 업무협약

저출생 극복...임산부 가정에 안전먹거리 제공

광주시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광주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임산부 등 양육 가정에 지리적표시 농산물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1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이남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 김경래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임산부 대상 지리적표시 농산물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 장려 문화 홍보, 전남지역 지리적표시 농산물 소비 확산,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5월 가정의 달 이벤트 추진' 등이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임산부 등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해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등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와 가족 친화적 사회 만들기 조성에 힘을 기울인다.

지원 대상은 임신부 또는 출생(2025년 1월1일 이후)한 자녀가 있는 광주지역 가정 1000가구를 선정해 2만원 상당의 전남지역 지리적표시 농산물 5종을 제공한다.

참여 방법은 광주아이키움 플랫폼에서 지리적표시 농산물에 대한 간단한 퀴즈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지리적표시 농산물을 무작위로 선정해 등록단체(5개소 선정)가 상품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남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리적표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지역 농산물의 소비가 촉진되고 지역 경제와 농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협약은 임산부에게 양질의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해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지리적표시 농산물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정보 '하향'

가금농장 방역 준수 당부

전남도는 10일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 정보가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됐지만, 여전히 불철 추가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소독 철저히 등 차단방역 수칙 지도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위기정보 하향은 겨울철새 북상으로 개체 수가 줄고, 전남의 발생 방역지역이 모두 해제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및 확산 위험도가 낮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남 가금농가에선 이번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5건이 발생, 전년대 38% 줄었다. 전국 오리 사육량의 50%를 넘는 상황에서도 겨울철 발생 시기 중 역대 최소 발생, 최소 살처분 등 방역 성과를 거뒀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이번 성과는 발생 위험지역 오리 사육제한(117호) 실시, 가금 농장 차단방역시설 지원(116억원), 차단방역 현장 교육으로 농장주 방역의식 개선 등 방역 관계자와 가금농장, 계열사의 강력한 협력체계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과거 철새가 북상한 이후 환경에 남아있는 바이러스가 농장 단위 차단방역이 미흡한 틈을 타 봄철에도 추가로 발생한 점을 고려해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전체 가금의 출하 전 검사체계, 소독 등 행정명령·공고 유지 등 예방 대책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금농장에서는 경각심을 잃지 말고 전실 사용 생활화, 축사 출입 시 손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유공자법 연장자 자녀 우선 조항은 차별

현재 "재산·소득 고려해 지급"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습금의 우선권을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주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현재는 10일 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3호 중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국가유공자법 13조 2항에 따라 유족 간

협약이 없으면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가, 유족 간 협의도 없고 부양 정도가 비슷하면 나이가 많은 자녀가 우선권을 갖는다.

현재는 이중 나이가 가장 많은 자녀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연장자 우선 조항은 개별적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이 많음을 선순위 수급권자 선정의 최종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 기군 브로커